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김은중(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I. 서론—정당성의 위기와 사회적 저항의 분출
- II.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변동
- III.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양상
- IV. 원주민-농민 운동
- V. 신자유주의와 원주민-농민의 재영토화(reterritorialización)—자본의 외부
- VI. 결론

I. 서론—정당성의 위기와 사회적 저항의 분출

멕시코 역사학자 엔리케 크라우제(Enrique Krauze)는 세계사적으로 ‘경이로운 해’로 기록될 1989년을 경계로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전통적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네 가지 질곡—군부독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민주주의적 수령주의 그리고 폐쇄경제—에서 벗어나 정치적·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1990, 25). 그러나 민주주의로 이행되면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에 국민들은 급격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에서는 두 명의 대통령이 실각했고, 파라과이, 페루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Eun Joong K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beroamerican Institute, ocpaz@hanmail.net), “Social Transformation and Movement in Latinamerica”.

하고 물러났으며, 베네수엘라와 페루에서는 부패한 정권이 붕괴되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그리고 에콰도르에서는 사회운동이 단순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 진보적 정권이 탄생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회운동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운동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볼리비아 꼬차밤바시(Cochabamba)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물(水)전쟁(Guerra del agua)”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볼리비아에서도 천연가스의 국유화를 요청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대통령이 사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에콰도르에서는 멕시코 사빠띠스따¹⁾ 반란에 이어 원주민 봉기가 발생했고, 브라질에서는 전국적으로 무(無)토지 농민운동(Movimento Sem Terra, MST)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실직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메웠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행을 거쳐 공고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 현상들은 정치구조가 수용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은폐된 억압과 배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사회적 저항의 배경에는 1990년대 초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유일한 지평으로 확장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과정은 세계화의 과정과 겹쳐지면서,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적 형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화는 더욱 강력한 시장중심적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작용의 심각성은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라고 볼

1)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표기를 원음에 충실하게 적었다. 예를 들어 Zapatista는 ‘사빠띠스따’와 ‘사파티스타’로 옮길 수 있으나, ‘사빠띠스따’는 본 논문에서 원음에 충실하게 적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사파티스타’는 간혹 번역서를 인용한 경우에 번역서를 그대로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시민들의 50% 이상이 실질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정부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박정훈 2004, 324).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방식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현재의 복합적인 사회 위기와 새로운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여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양상의 사회운동은 문화적 권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문화적 권리란 극단의 개인적 자유(프리바토피아, private + utopia)와 파시즘적 거대담론 간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권력과 강제 속에서 역동적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화와 세계화의 이중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원주민 운동을 통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대안 세계화운동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변동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운동에 관한 고전적인 패러다임은 사회적 행위자보다 사회구조가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은 작금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행위자와 그들의 사회적 행동양식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와 탈근대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를 단계론적 극복의 관계로 보던 대당(對當)적 시각에서 벗어나 역동적 상관관계로 파악하는 단계로 진일보하고 있다. 근대성의 틀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개인 간 계약성, 시장중심주의) 또는 사회주의(중앙적 계약성, 국가중심주의)의 문제들에 종속되거나 환원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양자가 민주주의의 문제를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결정론과 구조를 이루는 요소-정치, 경제, 문화, 사회-들 사이의 본질주의적이고 추상적인 상호관계를 넘어서서 유연하고 역동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II.1. 탈영토화(desterritorialización)-민족국가의 외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가시적인 힘은 통신수단의 혁신을 통한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지역적 맥락과 얽혀 있는 사회적 사건들과 사회관계들이 초국가적 차원의 질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국민국가의 영토적 공간이 공동체의 삶을 결속하는 경계라는 것이 전통적인 인식이었지만, 오늘날 그러한 결속은 약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사건들은 빈번히 정해진 경계를 벗어난다. 자본과 상품의 흐름으로부터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이동, 그리고 이주와 문화적 접촉을 통한 세계화의 과정은 탈영토화의 경험을 일상화하고 있다. 탈영토화의 경험은 현존과 부재의 교차, 즉 먼 거리의 사회관계와 토착적 삶의 흐름과의 교차라는 이중적 인식이다. 이중적 인식은 초국가적 차원의 치외법권적(exterritorial) 힘이 작동하는 가상적 공간과 공동체의 일상적이고 규범적인 가치에 뿌리를 둔 삶의 공간을 혼동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탈영토화의 경험은 내부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외부를 사유하는 것이며, 동시에 외부적 시선을 통해 내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탈영토화가 가져오는 이중적 인식의 위험성은 내부가 외부에 의해 포섭(co-optation)되고 수용(expropriation)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실제의 지역성이 해체되어 비장소(Non-place)가 되는 데 있다.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Marc Augé)가 지적한 것처럼 “만일 장소를 관계적이고 역사적이며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때 관계적이거나 혹은 역사적이거

나 또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의될 수 없는 어떤 공간은 비장소가 될 것이다(톰린슨 2004, 157, 재인용).” 비장소화는 탈영토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세계화의 또 하나의 특성인 시간의 가속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영토화는 어느 경우에도 지역적-토착적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Borja & Castells 1997).

탈영토화의 경험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결부시켜 이야기한다면 일상적이고 각인된 민족국가라는 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네그리와 하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대적 개념은 민족국가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현대적 상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민족국가의 역할과 그 역할에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많은 이론가들은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현상들이 민족국가의 힘을 침식하거나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많은 이론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과 반론은 모두 옳다. 세계화의 시대가 민족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족국가는 여전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통제와 문화적 규범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족국가는 최상의 권위를 상실했다(Michael Hardt & Toni Negri 2002, 159).

독재와 권위주의 상태에서 민족국가는 생활세계의 여러 층위들의 잡다(雜多)함을 덮어버리는 그림자이다. 민주주의 전 단계에서 근대의 민족국가는 ‘시민도 주체도 없는 해방(emancipación sin subjetividad ni ciudadanía)’을 내세우는 전체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 개혁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 지리적으로 한정되고 통제된 민족국가적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탈영토화의 경험은 사회의 각 영역들이 서로 겹쳐지고, 섞이고, 대립하는 이질적 회로를 통제하는 수단이 사라지고 해체되어버린 아노미 상태다. 그러나 삶의 다차원성은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는 기회며, 인식의 지도에 새로

2) 국가, 시민, 주체 사이에 작용하는 사회운동의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은 Boaventura de Sousa Santos(2001)의 견해를 참조했다.

운 지평을 드러낸다. 따라서 탈영토화는 공간의 탈중심화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인식론적인 면에서 하나의 지배적 양식의 상실을 의미한다. 내부와 외부로 가르는 영토적 경계는 동시에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자아와 타자를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폐쇄된 세계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를 숨겨줄 성소는 없다. 세계화의 과정과 더불어 ‘공동선’이 영토적 경계를 넘나들며 ‘나만의 것’을 다른 맥락으로 재정의하기를 요구한다. 탈영토화는 다원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이며 탈구된(dislocated) 삶의 영역들을 절속시키는 것이다. 탈영토화는 영토 내적 억압에 대한 저항이며 이를 통한 부분적 해방의 경험이다.

II.2.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정치적 기반의 재편성

세계화의 또 다른 국면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서구 근대사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의 총괄이었던 자유주의가 세계화와 맞물린 상황에서 새롭게 부활한 것이다. 근대의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시장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자유주의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 시장에 대한 ‘경제외적’ 개입들의 극복이라는 경제적 차원의 극대화를 의미한다.³⁾

세계화는 자본의 초국가적 과정에 합류한 사회적 집단과 배제된 집단 사이의 간극을 증가시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적 수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사회보장, 교육, 정보에의 접근성 등—의 불평등과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화의 탈영토화 경험을 통해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특권구조를 탄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권위주의적인 국민국가의 권력이 ‘시민도 개인도 없는 해방’

3)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세계화의 차원이 종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동의어로 인식되는 것은 세계화가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이기 때문이다.

이었다면,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은 ‘주체 없는 시민의 해방(emancipación con ciudadanía y sin subjetividad)’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국가의 형성이 세계화와 대립되는 과정이 아니라 세계화의 기능이자 표현이라는 것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다 (Robertson 1992; Greenfield 1992).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화의 현 단계에서 민족국가의 권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시장을 통하여 중개되는 복잡하고 팽창하는 관계의 망을 형성하는 기업과 개인들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현상으로 부각되는 것이 개별화 과정이다. 즉 개인의 자율성의 환경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내세우는 평등은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근대적 인간 개념에 집약되어 있다. 그것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도록 사회정치적으로 등가(等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등가성을 보장할 장치가 역사 이래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가정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일 뿐이다. 사회적 삶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인간의 평등은 민주주의 원리로서의 ‘1인 1표’일 뿐이며, 시장에서의 평등은 약화된 국가의 기능으로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의 외부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화로의 이행이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비정상적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신자유주의의 자본은 민주주의를 통해 정상화된 사회구조의 정상적 권력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증가되고 있는 사회운동은 자본이라는 정상적 권력에 대한 저항의 표출인 셈이다.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참여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사회운동의 이행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의 탈영토적 특성이 국민국가의 권위적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1990년

4) 조희연은 이러한 과정을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다(2004, 32).

대 중반 이후 전(全)세계적인 사회운동은 반(反)세계화 운동이라기보다는 반(反)자본주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캘리닉스 2003; 하먼 & 리즈 2000).

III.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양상

경제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변화의 한 차원이기 때문에, 고립된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는 민주화와 세계화의 이중적 진행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내적인 허구성과 모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극복을 위해 라틴아메리카는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경제개혁이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판적 한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통합은 국가 경제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지역적 경제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차별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셋째, 정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생산구조와 생산주체 사이의 결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개인적 존엄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가치를 느끼며, 사회적 불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시장 그 자체만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은 과거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미국과 유럽의 사회운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아직 선부른 단정하기는 하지만, 선진 자본주의 모델 외부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전까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동인(動因)은 세 가지의 커다란 정치사회적 흐름, 즉 해방신학, 서구적 세계관과는 다

른 우주관에 입각한 원주민 봉기,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은 이 세 가지 방향의 사유와 행동이 합류하면서 그 전의 사회운동보다 더 풍요롭고 복합적인 '잡종'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 차별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변화는 198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를 강타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몰고 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자의반 타의반 적용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생산과 재생산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 삶의 토대를 이루는 영토적(territorial)이고 상징적(symbolic)인 형식을 해체하고 붕괴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강력해진 신자유주의의 발효와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 이후 이질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을 6가지의 양상으로 구분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의 말을 빌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의 양상은 자율주의적 반자본주의에 가깝다(캘리니코스 2003).⁵⁾

사회운동의 방식 면에서 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적 행동의 목표는 국가에 주민들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회 분야와 정치적 정당과의 동맹을 수립하거나, 혹은 사회운동의 범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행동 목표는 국가중심적 체제를 인정하고, 지도자로서의 엘리트와 지도받는 자로서의 민중을 구별하는 것이며, 사회운동의 주체의 입장에서도 운동의 피라미드 구조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계화의 흐름과 병행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사회운동을 수행하는 저항의 주체와 저항의 대상이라는 양(兩) 진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저항의 주체 진영에서 보자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변화로 인해서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행위자와는 다른 행위자 집단이 출현하고 있다. 세계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자율주의 운동의 양상은 중앙집권적 권력을 거부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운동을 조

5) 사회운동의 나머지 5개의 양상은 반동적인 반자본주의, 부르주아적 반자본주의, 지역주의적 반자본주의, 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다.

직하고 행동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브라질의 무(無)토지 농민, 과테말라의 원주민, 볼리비아의 수(水)자원 민영화 반대운동원들과 코카재배 농민들, 아르헨티나의 실업자들이다. 또한 저항의 대상도 국민국가(nation-state)가 아니고, 그 뒤편의 민간자본이나 초국가적 자본으로 바뀌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자율주의 운동은 1970년대 처음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이탈리아의 자율주의나 그 뒤 북미로 확장된 자율주의와 저항의 방식에서 유사하다. 즉 나오미 클라인의 언급처럼 “세계화에 대해 그 자신의 고유의 지역화로, 권력 공고화에 대해 급진적 권력 분산으로 대응한다”(캘리니코스 2003, 112, 재인용). 그러나 행동의 주체 면에서 이질성을 보인다. 이탈리아와 북미의 자율주의는 국민국가라는 개념과 민중이라는 개념을 허구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다중(multitude)을 행동의 주체로 주장한다. 그들이 다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카사리니와 하트가 제2차 세계사회포럼에 주장했듯이, 유럽에 기원을 두고 있는 부르주아 좌파와 백인 노동자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Barchiesi et al. 2002).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자율주의 운동은 이러한 유사성에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다중의 탈영토적 욕망을 강조하는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와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이행과정에서 상이한 사회적 맥락을 가로지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영토권(territorialidad)이다. 즉 사회운동의 목표가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tierra)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영토권은 1960년대 영국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서 시작되어 70년대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의 작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문화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시작된 엔클로저(enclosure) 운동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과도 직결되어 있다.

둘째, 자치권(autonomía)이다. 자치권은 영토권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으며 특히 공동체의 운영방식과 결부되어 있다. 자치권은 인위적인 행정단위로 나뉜 지방자치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물질적 토대와 더불어 상징적 생산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토지와 더불어 상품화할 수 없는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이 주장하는 자치의 문제다.

셋째, 문화정체성(identidad cultural)이다. 근대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내세운 보편적 인간과 근대적 인간이 바라보는 우주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시민 개념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1인1표의 평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다(多)민족성(plurinacionalidad), 인종적 시민(ciudadanía étnica)과 같은 개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넷째, 재현성/대표성(representación)이다. 이것은 문화연구와 결부하여 스피박(Spivak)이 던진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사회운동이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시위와 행동을 통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의사표시의 폭력성이라는 문제를 뛰어 넘어 현실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의 역할이다. 통상적으로 페미니즘의 분야에서 연구되는 주제와 맞닿아 있으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의 역할은 새로운 가족의 윤리, 공동체의 지속성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인다.

여섯째, 노동의 조직과 노동이 자연과 맺는 관계다. 이것은 문화정체성에서 파급되는 우주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서부터 생태학적 공동체라는 문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공통된 특징들은 개별적 사안들이면서도 동시에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의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영토권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특질로 생각된다. 영토권은 기존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실패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운동 전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과 맞물려 대륙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인과의 고리 속에서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운동방식이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사빠띠스따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르코스가 말했듯이 “의사결정의 수직적 모델을 벗어나 각 지역에서 자기방식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박정훈 2004, 65).⁶⁾

IV. 원주민-농민 운동

멕시코 사빠띠스따 운동 이후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다음 해인 2000년 1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후에도 세계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의 회의 장소에도 어김없이 시위대가 집결했고 충돌이 발생했다. 사빠띠스따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농민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2000년 9월, 나는 프라하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연례회의를 막기 위해 2만 명의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유럽에서 온 시위자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위자도 엄청났다. 서로 다른 세력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플래카드, 깃발, 최루가스, D자형자물쇠와 최루탄, 에너지와 이념들이 거리에서 물결쳤다. 그리고 그날 수천 명이 외쳤던 구호는 1994년 1월 아침 산크리스토포발(San Cristóbal) 광장에서 울려 퍼진 바로 그

6) 사빠띠스따 운동에 대한 나오미 클라인의 지적은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랜드연구소(RAND)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파티스타는 “벼룩의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인터넷과 세계적 NGO 네트워크 덕분에 “벌떼의 전쟁”으로 변했다”(캘리니코스 2004, 112, 재인용)

구호였다. 그것은 ‘야, 바스타!’(Ya basta!), 즉 ‘그만 해라!’였다.(폴 킹스 노스 2004, pp.20-21)⁷⁾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적 행위자로 원주민이 출현한 것은 지난 세기 말에 일어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다. 원주민 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인종정치학적(etnopolítico) 갈등이 그려온 역사적 경로의 전환점이며, 신자유주의적 지정학(geopolítica)의 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전지구적 투쟁에서 새로운 전선으로 등장했다. 원주민 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적 권리(derechos territoriales)다. 영토적 권리는 단순히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자결권(自決權) 행사를 통한 자치(autonomía)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들의 실존과 자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면서 공적 토론의 중심으로 등장한 원주민 운동은 탈냉전 이후 새롭게 떠오른 정체성과 인종정치학적 갈등의 광범위한 지구적 흐름에 대한 의사표현이었다.⁸⁾ 1989년까지 냉전의 논리가 인종정치학적 갈등을 가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또 다시 인종민족주의(etnonacionalismo), 근본주의 그리고 중동의 갈등이 원주민 운동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PNUD 200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중심의제로 떠오른 원주민 운동의 핵심에는 원주민의 영토적 권리가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주민의 고유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일 수 없는 증표

7) “서로 다른 세력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방식으로”라는 것은 ‘스위밍’(swarming)을 의미한다. ‘스위밍’은 넓은 네트워크 지지기반을 통해 국지적인 동시에 세계적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조직화 방식이다. 이런 조직화 방식에서 또 하난 특기할 점은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업활동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 명이 기업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이나,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해서 감추고 싶은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드라클라전략’ 등도 새로운 대중운동 방식에 속한다.

8) 인종정치적 갈등은 대략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인종 간(間) 갈등, 둘째로 소수 인종의 분리주의적 갈등, 셋째로 산업화된 사회로 이주한 소수 인종의 투쟁과 운동, 넷째로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운동이다(PNUD 2004; Gurr 2000).

로서 영토적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원주민의 영토에 미친 충격에 대한 논의에서 영토와 공간의 개념은 기하학적인 추상적 관심에 불과하거나, 민족국가의 공간적 표식을 강조하는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지방주의적(regionalista) 사유의 아류일 뿐이다. 또한 거대 프로젝트와 엔클라베(enclave)⁹⁾를 통해 초국적 기업이 원주민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생물 탐사, 광물 채취, 댐 건설 등은 세계화가 저지르는 공간적 침탈의 가시적인 면에 불과하다. 초국적 기업이 원하는 것은 “시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며, 원주민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토지를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고 개인 자본과 기업의 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주민들을 근대화시키는 것”이다(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1995, 2-3).

초국적 자본의 행태는 세계화와 자본의 확장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엔클로저(enclosure)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역사에 기록된 두 번의 엔클로저 운동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변혁의 서곡이었다면, 현대판 엔클로저 운동은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자본주의의 완성을 알리는 종곡(coda)이다.¹⁰⁾ 자본주의의 역사를 연구했던 경제인류학자 폴라니는 엔클로저 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엔클로저 운동은 빈민에 대한 부자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주와 귀족들은 때로는 폭력을 수단으로, 때로는 강압과 협박으로 사회질서를 뒤엎고 고래의 법과 관습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빈민으로부터 공유지 사용권을 박탈하고, 아직 망각했던 관습에 의해 빈민들이 자기네 것으로 알았던 가옥들을 허물어버

9) 타국 영토로 둘러싸인 지역(영토)

10) 사빠띠스따 원주민-농민 운동이 공유토지를 사유화하는 조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1917년에 발효된 혁명헌법 27조는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에 제한을 가했다. 에히도(ejido)는 나누거나 사고팔 수 없었고,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관리했으며, 농촌의 자급자족과 안정을 확보하고 빈곤을 물리칠 책임이 있었다.

렸다. 사회의 골격은 무너져버렸다. 황량한 마을과 거주지의 폐허는 그 혁명의 격렬성을 말해 주었다. 그것은 국토를 위협하고, 도시를 폐쇄하게 만들고,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지력이 고갈된 토지를 먼지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괴롭혀 예절바른 농부를 거지와 도적의 폭도로 만들어버렸다.(1991, 53)

제1차와 제2차 엔클로저 운동은 몇 가지의 차이가 있었다. 15세기 마지막 수십 년과 16세기 첫 수십 년 동안에 벌어진 제1차 엔클로저 운동이 대지주나 귀족, 혹은 봉건영주에 의해 자행되었다면, 16에서 18세기에 걸친 제2차 엔클로저 운동의 주체는 부유한 향신이나 상인들이었다. 그들이 점유한 토지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다. 제1차 엔클로저 운동의 경우 대지주나 귀족, 영주들이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둘러친 것이라면, 제2차 시기에는 개방경지라고도 불린 공동용지, 그리고 공동지, 공동황무지, 공동목초지 등이 점유의 목표였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좀더 근본적인 차이는 제2차 엔클로저 운동의 절정이었던 “18세기에는 법률 자체가 국민의 공유지를 약탈하는 도구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 약탈의 의회적 형태는 ‘공유지 엔클로저 법’, 다시 말해 지주가 국민의 토지를 사유지로 자기 자신에게 증여하는 법령, 국민 수탈의 법령”이었다(이진경 2004, 286,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공격은 제3차 엔클로저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주체가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자본으로 옮겨졌고, “국가와 자본 사이의 영토적 비일치(territorial noncoincidence)”(스미스 2000, 422)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국제적 합의의 보호 아래 눈부신 기동성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500년에 걸친 투쟁의 산물입니다.”(마르코스 2002, 89)라는 말로 시작되는 라칸도나 정글의 첫 번째 선언은 원주민 운동이 국내적 저항의 차원을 뛰어넘어 초국적 자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웅변한다고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정복 초기의 엄청난 충격을 이겨냈고, 독립 이후 공화국의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과정에서 저질러진 억압

도 견뎌내며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강제하는 위협을 이겨내리라는 보장은 없다. 브레너(Brenner, N.)가 지적하듯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자본주의의 물리적-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적-정치적 공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Toledo 2005, 82, 재인용).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지배라는 현상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이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강한 의미에서 강제고 의무가 된다. 기아에 의해서든 결핍에 의해서든 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팔고 시장에 나가서 상품을 사는 ‘내적 강제’가 자본주의적 시장의 전제고 요체다. (...) 따라서 **단순상품생산 내지 소생산에서 비롯되는 국지적인 자연발생적 교환의 장**으로서의 시장과 **기아와 결핍을 통해 강요되는 전면적 교환의 장**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멸절한 고기와 텃에 놓인 고기를 구별 못하는 너구리보다 더 한심한 일이다.(이 진경 2004, 303-304, 강조는 저자)

신자유주의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농민 운동은 대단히 국지적이며 허약해 보인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저항은 자본의 외부에서 가능하며, 근대의 역사에서 자본의 외부에 있었던 제3세계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사빠띠스따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자본에 대한 전지구적 저항이 반대와 비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는 세계사회포럼(WSF)으로 발전하여 브라질 남단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¹¹⁾ 그리고 2004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에콰도르의 키토(Quito)에서 제1차 아메리카사회포럼(Foro Social Américas)이 개최되었다. 아메리카사회포럼은 세계사회포럼의 아젠다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지역에 따라 스스로의 사고와 전략을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을 보인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¹²⁾

11) 2001년 처음으로 열린 세계사회포럼은 2004년에만 인도의 뭄바이에서 개최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다.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도시는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에 대한 시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예산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V. 신자유주의와 원주민-농민의 재영토화(territorialización)- 자본의 외부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영토(territorio)는 경제학적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tierra)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영토는 사회가 집단적으로 조직되는 공간으로서,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주체가 공간을 제도화하고, 주체 역시 공간 속에서 제도화된다. 따라서 영토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화는 생산양식의 발달을 포함한 경제적 과정에서부터 지식, 과학, 기술의 영역을 거쳐 엄밀하게는 주체의 차원에 속하는 우주관, 영성(靈性), 느낌, 양심까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장(場)이다. 다시 말해, 문화는 개인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포괄하는 모든 인간적 형태다. 인간의 역사에서 문화가 항수(恒數)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과 문화를 가르고, 주체와 타자를 가르는 변별의 기점이며 갈등의 문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는 자연과 문화, 주체와 타자의 접선과 경계에서 생성하고 변이한다(김은중 2005). 그러나 근대성은 문화로 자연을 극복하고, 주체로 타자를 극복하는 진보의 이데올로기 위에 성립되었다. 문명 vs. 야만이라는 척도는 자연과 문화를 갈라놓았고, 주체로 하여금 타자를 복속시키는 구실이 되었다. 이러한 척도 아래서 문화적 접촉은 쌍방적 영향이 아니라 일방적 문화변용(aculturación)이 된다.¹³⁾

투쟁의 요인으로서의 문화가 특유의 극적인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인류에게 유일하고 보편적인 가치철학으로 등장한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로 무장한 이후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거대한

12) 농민운동조직으로는 1992년에 니카라과의 마나구아에서 창설된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를 들 수 있다. 중소농들, 농업생산자들, 농업지역의 여성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유럽의 토착 공동체의 단체들이 가입해 있으며 세계사회운동조직 중 조직력과 투쟁력이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다.

13) 영토적 권리가 단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의 핵심적 특징에서 벗어나 일반적 관점의 사회운동에서도 핵심적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화 개념에 대한 재고가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특징을 혼혈성(mestizaje) 혹은 잡종성(hibridación)이라고 지칭할 때, 이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블랙홀이다. 앞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교환과 그것을 통한 삶의 순환을 상품화된 교환으로 바꾸어버리는 블랙홀이다. 자본주의는 외부를 인정하지 않는 내부고, “순수한 국가(estado puro)”(Toledo 2005, 83) 다.¹⁴⁾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영토는 무엇보다도 상품화되지 않고, 교환되지 않는 무엇이다. 그들이 말하는 토지는 자본의 외부에서 영토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토지다. 맑스의 유명한 말을 변형시켜 말한다면, “토지는 토지다.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그것은 상품이 된다.”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노동과 토지가 상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즉 노동과 토지는 마치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들인 양 취급되는 것이다. (...) 노동은 인간에게 붙여진 다른 이름일 뿐이며, 토지 역시 자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변화의 넓이와 파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는 인간과 자연의 운명을, 자체적인 법칙에 따라 통제하고 궤도를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장치의 작동에 넘겨준 것이다(폴라니 2002, 26-27).”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의 핵심적 주장인 영토에 관한 권리는 민족국가의 외부로 작동했던 탈영토화의 경험과 결부시켜 재영토화(reterritorialización) 혹은 민족적 영토화(etno-territorialización)라고 말할 수 있다. 얼핏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내부-외부, 통제-해방이라는 인식의 틀에서 생각하면 모순되지 않는다. 앞에서 ‘탈영토화는 어느 경우에도 지역적-토착적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비정상적 권력으로 작용했던 민족국가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민족국가의 외부로서 기능하는 탈영토화가 요구되었다면, 민주화 과정과 동시에 정상적 권력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서 탈영토화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공동체적 문화로 회귀하

14) 여기서 ‘순수(純粹)한(puro)’의 의미는 ‘잡다(雜多)한’의 대당이다. ‘잡다’는 3쪽에 언급한 생활세계의 잡다함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란 기하학적 추상성을 의미한다.

는 재영토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재영토화가 다시 민족국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적 영토화’라는 용어를 동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⁵⁾ 민족적 영토화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공동체 혹은 코뮌주의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세계화는 세계기업 및 시장의 힘을 대폭 증가시키는 반면, 국가의 권한을 제한한다. 그리고 민주적 책임이 거의 없는 국제기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변화들은 정치적 권한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정치적 권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이며,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하다 보면, 국제기구의 강화와 국가 주권의 강화라는 두 가지로 명백하게 나뉘게 된다. (...) 다행스럽게도 이 이분법은 잘못되었다. 참된 선택은 세계 권력이나 국가 권력에 있지 않다. 참된 선택은 모든 단계에서 민중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나, 아니면 국제적 단계에서는 물론 지역적 국가 및 국지적 단계에서 자치를 확장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이냐이다.(제레미 브레치 2003, pp. 67-68)

국가권력은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시장의 대당(對當)적 권력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국내시장의 창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생산수단을 탈취하고 소(小)생산을 파괴하는 과정을 통한 ‘본원적 축적’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간의 구별이나 지방간의 구별, 도시와 농촌의 구별을 넘어선 전국적 시장을 수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것은 시장이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즉 시장의 자연적 작동은 다양한 국가적 통제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다.(이진경 2002b, 471-609) 이러한 자본과 국가의 관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9.11테러 이후 반(反)세계화 운

15) nación과 etnia를 모두 민족으로 옮겼다. estado-nación은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로 옮길 수 있으나 앞에서 민족국가를 사용했다. 국가라는 개념이 필연성이 없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국민국가가 더 타당하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유대감이 있는 경우에는 민족국가라는 더 타당할 것이다. etnia를 nación과 구별하기 위해 인종이라고 옮기면 지나치게 혈통적 유대감을 표시할 우려가 있다.

동이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과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신자유주의 앞에 ‘무장한’(armado) 혹은 ‘전쟁 중인’(en guerra)이라는 형용사(구)가 첨가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예다(Serfati 2001). 즉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순수 시장의 논리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집단적 구조물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68혁명 이후 서구의 사회운동은 국가 지향을 탈피하여 모든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동원이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소수 그룹에 머물러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헤게모니를 획득한 시민운동과 진보정당-노동조합 운동은 여전히 권력 지향적이다. 소위 68혁명 이후의 신(新)사회운동은 산업사회의 사회운동과는 구별되는데, 그 중에서도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인 다양하고 분화된 사회체제의 이슈에 맞춰 ‘개혁의 정치’(Politics of Reform)보다는 ‘영향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다중들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사회에 내재된 관습, 관행, 제도 규범 등의 문제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정치기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구성원들을 공공영역에서 연대할 수 있는 방식이 곧 원주민-농민의 영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주민 운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는 자결권을 가지는 자치다. 그들의 자치방식이 수평적 의견수렴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평등한 의식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자치가 결코 돈 몇 푼을 적선하는 것으로 해결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와 더불어 노동 역시 상품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상품화되지 않는 토지에서 상품화되지 않는 노동이 곧 그들이 생각하는 자치의 방식이다. 영토적 권리와 더불어 자치에 대한 요구 역시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조건이 강제되기 이전의 인간 보편적

방식의 재영토화다. “자본주의 이전의 유럽 사회는, 식민지에서 발견한 이른바 ‘미개사회’와 마찬가지로 일이나 생활이 공동체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공동체가 통째로 곤경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개인들은 굶어죽을 염려가 없었다. (...) 마찬가지로 16세기 초엽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사회조직에서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조건이 인정되고 있었다“(이진경 2004, 302-303).

VI. 결론

21세기 사회는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산업을 바탕으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계급이라는 집단적 요소보다 비계급 집단이, 비계급 집단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에 가려져 있던 개인적 차원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통제-해방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든 개인이 더 많은 해방을 누리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구조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민족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사회적 집단과 개인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정상적 권력의 모습으로 등장한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정상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상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급진적으로 확장하여 보편적 인간주의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으며, 일국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지구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 소유가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관리 형태와 통제를 동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며, 사회운동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도 이 지점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정치적 기반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운동도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단일한 목적을 가진 급격한 사회정치적 변혁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집단이 때로는 산발적으로,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은 대륙 안에서, 대륙 간에 활발한 접촉과 유대를 이루어가고 있다. 2004년을 제외하고 세계사회포럼(FSM)이 계속해서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으로 아메리카 사회포럼(FSA)이 2004년 12월 에콰도르에서 개최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 운동은 특히 많은 점을 시사한다. 원주민 운동은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벗어나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들의 존재방식은 수세기 동안 이어온 그들의 저항의 역사이면서, 보편적 해답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그들의 과거는 '오래된 미래'이며, 새로운 세계는 세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은폐된 채 드러나기를 바라는 수많은 다양성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 다양한 현실들은 영토권과 자치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코뮌주의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Abstract

Es evidente que las sociedades latinoamericanas viven una profunda transformación en un proceso democratizador. Los movimientos sociales del continente están transitando por nuevos caminos, que separan tanto del viejo movimiento sindical como de los nuevos movimientos de los países centrales. A la vez, comienzan a construir un mundo nuevo en las brechas que han abierto en el modelo de dominación. Múltiples y variados procesos sociales y políticos en curso en algunas regiones parecen encaminados a construir una alternativa superadora del rumbo neoliberal adoptado por la casi totalidad de los gobiernos de la región

en décadas pasadas. Las corrientes de pensamiento y acción convergen dando lugar a un enriquecedor mestizaje, que es una de las características distintivas de los movimientos latinoamericanos. Los movimientos más significativos poseen rasgos comunes.

Buena parte de estas características comunes derivan de la territorialización de los movimientos, o sea de su arraigo en espacio físicos recuperados o conquistados a través de largas luchas. La territorialización trata de pensar al movimiento indígena desde su constitución como sujeto político y su interlocución con el Estado, la democracia, la cultura, el derecho, los recursos naturales y la economía. La centralidad renovada que adquieren hoy, en medio de los procesos de globalización y neoliberalismo, los derechos territoriales indígenas, para garantizar el derecho a la libre determinación de los pueblos y realizar aquel estándar de derechos internacionales. La tierra no se considera sólo como un medio de producción, superando una concepción estrechamente economicista. El territorio es el espacio en el que se construye colectivamente una nueva organización social. donde los nuevos sujetos se instituyen, instituyendo su espacio, apropiándose material y simbólicamente. El movimiento social que surge es que el ansiado mundo nuevo está naciendo en sus propios espacios y territorios, incrustando en las brechas que abrieron en el capitalismo.

Key Words: Movimiento social, Democratización y globalización, Movimiento Indígena, Territorialidad, Neoliberalismo armado / 사회운동, 민주화와 세계화, 원주민 운동, 영토성, 무장한 신자유주의

논문투고일자: 2005. 06. 22

심사완료일자: 2005. 07. 15

게재확정일자: 2005. 08. 20

참고문헌

- 김은중(2005), 「세계화, 정체성, 다문화주의」,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1, pp. 137-179.
- 마르코스(2002),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해냄.
- 마이클 스미스(2000), 「근대화, 세계화 그리고 민족국가」, in 폴런드 로버트슨/브라이언 터너 편,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사회문화연구소, pp. 403-427.
- 박정훈(2004), 『게릴라의 전설을 넘어』, 생각의 나무.
- 알렉스 캘리니코스(2003), 『반자본주의 선언』, 책갈피.
- 이성형(2002),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역사비평사.
- 이진경(2004), 『자본을 넘어서 자본』, 그린비.
- _____ (2002a),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 _____ (2002b), 『노마디즘2』, 휴머니스트.
- 자크 아탈리(2005),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 지식하우스.
- 제레미 브레처 외(2003),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아이필드.
- 존 톰린슨(2004), 『세계화와 문화』, 나남출판.
- 칼 폴라니(1991),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민음사.
- _____ (2002),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책세상.
- 크리스 하먼, 존 리즈(2000), 『저항의 세계화』, 북막스.
- 폴 킹스노스(2004), 『세계화와 싸운다』, 창비.
- Barchiesi, F. et al(2002), “Porto Alegre 2002: The Work of the Multitude”, multitudes-infos@samizdat.net.
- Borja, Jordi & M. Castells(1997), *Local y global*, Taurus, Madrid.
- García Linera, Alvaro(2003), “El zapatismo: indios insurgentes, alianzas y poder”, en *QSAL*, Num. 12, Sep-Dic de 2003, pp. 293-300.
- Greenfield, L(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Gurr, Ted(2000), *Peoples versus states minorities at risk in the new centur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Hardt, Michael & Negri, Toni(2002), “La multitud contra el imperio”, *OSAL*, Junio de 2002, 159-166.
-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1995), “Liberalismo fundamentalista contra los indígenas”, en *América Indígena*, Vol. LV, Num. 3.
- Klein, Naomi(2000), “The Vision Thing”, in *The Nation* (online edition), www.thenation.com.
- Krauze, Enrique(1990), “América Latina: el otro milagro”, en *Vuelta*, Num. 169, Diciembre de 1990, pp. 25-28.
- León, Magdalena(2004), “I Foro Social Américas: crisol de luchas, pensamiento e identidades del continente”, en *OSAL*, Num. 15, Sep-Dic de 2004, pp. 271-277.
- Leyva Solano, Xochitl(2005), “Indigenismo, indianismo y “ciudadanía étnica” de cara a las redes neo-zapatistas”, en *Pueblos indígenas, estado y democracia*, CLASCO, Abril de 2005, pp. 279-309.
- Macas, Luis(2005), “La necesidad política de una reconstrucción epistémica de los saberes ancestrales”, en *Pueblos indígenas, estado y democracia*, CLASCO, Abril de 2005, pp. 35-42.
- Meiksins Wood, Ellen(2000), “Trabajo, clase y estado en el capitalismo global”, en *OSAL*, Junio de 2000, pp. 111-118.
- PNUD(2004), *Informes sobre Desarrollo Humano 2004. La libertad cultural en el mundo diverso de hoy*, Nueva York.
- Robertson, R(1992), *Globalization*, London, Sage.
- Santos, Boaventuras de Sousa(2001),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en *OSAL*, Septiembre de 2001, 177-184.
- Serfati, C.(2001), *La Mondialisation armée*, Paris.

Toledo, Víctor(2005), “Políticas indígenas y derechos territoriales en América Latina: 1990-2004”, en *Pueblos indígenas, estado y democracia*, CLASCO, Abril de 2005, pp. 67-102.